

# “절편녹용 수입 앞서 살길부터 마련해라”

- 본회 국내 농가 종합 지원 대책 등 관계 기관에 건의 -



절편녹용 수입과 관련해 본회의 기본 입장은 ‘절편녹용 수입 절대 불허’에 변함이 없다.

국산녹용이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고 녹용의 산지별 품질에 따른 명확한 효능의 차이가 규명되지 않아 국산녹용의 한의약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축산물로 절편생녹용이 수입될 경우 그나마 국내 농가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놓은 생녹용 소비시장마저 외산에 잠식돼 국내 양록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최악의 상황까지 내달을 수도 있다.

이에 본회는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위와 같은 사항을 알리며 절편녹용 수입 반대 입장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가간 무역 장벽이 급속히 허물어진 현시점을 직시했을 때 무조건적인 반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십상. 따라서 협상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국내 양록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 위해 다양한 의견 또한 같이 통보했다.

본회는 우선 국산녹용의 우수성을 규명, 품질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



여건을 조성한 후에 수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녹용의 지표물질을 선정하여 산지별, 사육환경 및 사육방법의 차이에 따른 녹용의 효능 연구를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진행하여 소비자의 선택 여건을 수입에 앞서 먼저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록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국내 양록농가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수입될 절편녹용의 품질기준 제정, 제조 및 유통관리 규정 등의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본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절편생녹용이 축산물로 수입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정부간 협상에서 확실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절편녹용 수입개시 후에는 전지 생녹용 수출을 전면 중단해 용도외로 불법 유통 되거나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요구도 첨부했다.

본회는 위와 같은 제반사항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3년 1월부터의 수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과 유예기간 후에도 물량 조절 수입기간을 5년 이상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수입유예 및 물량제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물량제한 수입기간에 한해 전 수출 물량에 대한 수입창구를 한국양록협회 산하 양록사업단으

로 단일화시켜 절편녹용에 대한 검사 및 물량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수입유예 기간 및 물량제한 요구와는 별도로 절편녹용 수입시 발생할 국내 농가 피해를 고려,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본회는 구체적 지원 대책으로 ▲ 사슴 사육규모 전업화 지원 ▲ 생산비 절감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지원 ▲ 국산녹용 한약재 규격품화 사업 지원 ▲ 국산녹용 효능 규명 등 연구지원 등을 꼽았다. 아래는 구체적 지원 대책 건의 내용.

아울러 본회는 지난 5월 1일 축산단체장 간담회시 이영순식약청장의 발언(‘절편녹용 수입허용 않겠다’)에 의미를 크게 두고 절편녹용 협상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한국양록**